

## 정책제안서

<b>시골*에 최적화된 스마트 인프라 조성</b> - 시골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인프라 설치와 동시에 시골 발전에 기반이 될 커뮤니티 보드 구축 -		
정책명	안전한 시골 밤거리를 위한 스마트 보안등 구축	
정책 키워드	시골, 농촌, 스마트 보안등, 스마트시티, 커뮤니티 보드	
정책목표	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골의 밤을 밝게 비추어 범죄 및 사고 피해를 줄이는 것	
제안자	팀명	쏘스윗 (So Sweet)
	팀원	김동건, 강동희, 최수민, 최산, 임성민
	소속	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
	KDI(한국개발연구원)	차성훈 정책플랫폼팀 팀장, 임효지 연구원

\*본 정책제안서에서 말하는 시골은 팀의 최산, 임성민 학우가 거주 중인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와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를 지칭하는 것임을 미리 밝힘.

\*본 정책제안서에서 등장하는 보안등은 가로등과 동일 기능을 하는 도로조명시설로 전신주에 기반을 둠.

### I

## 제안배경 및 문제인식

### 1. 제안배경

□ 보안등 설치 수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생활 인프라 차이 발생

- 시골은 지역 내 보안등의 수가 지역 면적에 비해 적어 도심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두우며 이로 인해 각종 안전 및 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.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

<그림> 도시와 시골의 가로등·CCTV 개수 차이



- 시골의 경우 빛 공해로 인해 거주민의 보안등 점등을 기피함에 따라 어두운 밤거리로 인한 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.
  - 일부 거주민은 보안등의 빛이 농작물의 생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여 보안등을 점멸하여 빛의 부재로 인해 CCTV 영상 관독이 어려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    - ※ 실제로 보안등 및 가로등의 불빛은 발원지로부터 15~20m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며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개화하는 단일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함.
- 통계청 사이트에는 시 단위 데이터만이 검색되며 작은 단위 지역은 ‘기타 도시’, ‘도시 이외’로 포괄되어 데이터가 표출되어 작은 단위 지역에 대한 세밀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.
  - 작은 단위 지역은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  - 물리적인 생활 인프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역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

## 2. 문제인식

- 정부는 2018년 ‘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’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제시
  - 스마트 가로등, CCTV와 같은 시설을 통해 외진 지역의 교통 등 생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 정부기관에서까지 다른 지방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함.
    - ※ ‘지능형 정부’란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디지털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Smart Nation 조성하며 소외된 농어촌까지 지능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
-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평리와 세성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, 어두운 밤으로 인해 각종 안전 및 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답변했으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골 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
- 이에 (1)스마트 보안등 설치 (2)커뮤니티 보드 구축을 통해 농촌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데이터까지 수집하여 ‘지능형 정부’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

## II

## 정책제안

## 1. 빛 공해를 최소화한 스마트 보안등 설치

- 시골에 특화된 스마트 보안등은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 빛으로 제작하여 거리를 밝히는 동시에 농작물 생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는 LED 조명이 탑재된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
  - 스마트팜 기업 ‘로보팜’은 LED 조명 빛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
- 스마트 보안등 설치 범위 수정
  - 가로등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반면에 보안등은 한전주·전선주에 기반을 두어 설치되기 때문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만으로는 CCTV 화면이 보일 만큼 빛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. 따라서 빛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등 간 거리 관련 조례 수정 또는 정책 마련이 필요

## 2. 커뮤니티 보드를 통한 시골 주민의 의견 수렴

- 시골에 특화된 스마트 보안등이라면 시골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하나 시골 지역은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수요에 알맞은 정책 도출이 어려움
-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골 지역의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뉴욕시의 조닝 조례를 모티브로 한 커뮤니티 보드 정책 제안
  - 191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뉴욕시는 조닝제도를 통해 도시를 관리하고 있음. 이 과정에서 심의 절차가 필요한 서류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낸 후 주민 커뮤니티 보드에서 심의를 진행
  - 뉴욕시가 주민 커뮤니티 보드를 통해 주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시골 지역 역시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보드 제도가 필요함.
  - 이러한 커뮤니티 보드를 통해 엔지니어나 지자체, 기업들은 몰랐던 시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데이터가 부재하여 누락 되기 쉬운 시골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음.

## IV

## 기대효과

## □ 정책과 인프라의 양극화 현상 완화

-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, 지역 간 격차 감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나 시골 지역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극적
  - 지난 2022년 9월 개최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현대 사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들이 소개됐으나 시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기술은 부재
- 많은 지자체와 기업은 이익과 효율이라는 이유로 시골 지역의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음.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보다도 기존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.
- 그러므로 스마트 보안등을 통한 시골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, 커뮤니티 보드를 통한 거주민의 의사 반영 및 관련 데이터 축적은 지역 격차 감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